



세월호 참사 주범은 노동착취 강화 주범

관련 기사 2~3면

노사정위
결렬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4, 16 면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8~9 면

임금 삭감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6~7 면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논쟁

5 면

성매매처벌법
논란

10~11 면

그리스
시리아 정부 하에서도
투쟁은 계속된다

12~13 면

노동조합 운동과
초좌파주의

11 면

진실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함께

진상 규명 완전히 가로막으려는
“쓰레기 시행령”

김승주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정부(검찰, 감사원)가 이미 발표한 내용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한정한다. 둘째,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처장 산하 주요 직책에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전 해경)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셋째,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해 조사의 독립성을 해치겠다”(이호중 특별조사위원)는 것이다!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통제하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것은 뻔하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11월 7일 통과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의 발족을 끊임없이 회피하고 방해했다. 새누리당 의원 김재원은 특별조사를 “세금 도둑”으로 몰았다.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발족 준비 내용을 빼돌려 새누리당과 해수부,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이제 와서 “특별조사 위 정상 발족”을 근거로 시행령(안) 폐기를 못 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쓰레기시행령”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온전한 선체 인양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수중 수색 중단 이후 유가족은 즐기차게 선체 인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름뿐인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TF’만 구성했을 뿐 결정을 미뤘다.

사실 세월호보다 더 큰 화물선을 인양한 경험이 있는 국내 구난 업체들도 있다. 해

수부의 발표를 따르더라도, 2000년대 주요 해의 침몰 선박 15건 중 14건이 인양됐다. 이탈리아에서는 세월호보다 16배나 더 무거운 콩코르디아호가 2년반 만에 온전하게 인양된 사례도 있는데, 인양된 배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는 돈 문제를 흘렸다. 해수부는 지난 4월 8일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지원을 하는 데 총 5천5백억원이 들고, 인양하는 데도 1천2백억 원이 든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인양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도 전에 비용 문제부터 터뜨려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하려는 꼼수다. 구체적인 비용 책정 근거도 없다.

인양된 선체는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다. 아무쪼록 쓸모없는 군사력 증강에는 세금을 물 쓰듯 하는 정부가 인양 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지배자들의 비정한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돈으로 유족을 능욕하는 정부

유가족들이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며 광화문과 청운동 농성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배·보상안이 나왔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돈으로 진실을 거래하려 든다”며 속상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동안에도 유가족들은 알량한 생계비 지원조차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어렵사리 받아야 했다.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배·보상안) 시행령에서 심리 치료와 의료 지원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생계와 고용 보장을 없애 버렸다. 정부는 이제껏 제대로 된 지원을 한 적도 없으면서 유가족들을 보상금에 눈 먼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짜 돈에 눈이 먼 자들이 진실을 찾는 유가족들의 애틋한 심정을 매정하게 매도한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다”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가족을 능멸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 분노를 토해내는 유가족들. 4월 5일 안산-광화문 영정도보행진 후 열린 국민촛불.

깊어지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김지윤

“살인 사건이 하나 나도 경찰들이 잡복 근무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찾아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안 밝힙니다.”(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 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 방해에 매달려 왔다. 3월 27일 입법예고한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의 손발을 묶는 내용으로 채워진 “악마의 시행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백만 명이 서명해 겨우 반쪽짜리로 통과시킨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뿐 아니라 조서권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가족의 뜻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하겠다고 말하지만 “설계가 잘못된 건물은 유지 보수가 아니라 때려 부셔야 한다.”(이호중 특별조사위원)

결국 유가족들은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지만 경찰이 가족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1년 전 진도에서와 꼭 마찬가지로였다.

박근혜 정부는 별안간 정부가 내는 것도 아닌 국민성금 액수까지 임의로 포함해 배·보상 규모를 발표했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시행령에서 ‘돈’ 문제로 돌리려는 알박한 꼼수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겐 더한층의 모욕이다.

어두운 하반기 경제 전망이나 잡음이 새어나오는 한미일 동맹 등 정치적 상황이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지 않다. 박근혜 당선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우파의 단결도 예전만 못하고 그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같은 정치적 항의 운동과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를 위기로 모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홍준표가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폐지하며 우파의 수장 구실을 자임하려는 것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물타기

박근혜가 세월호 인양 검토를 언급한 것은 대중의 불만을 무마해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박근혜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노총 4·24총파업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오버랩 되며 4·29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갑작스레 터진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에게 닥친 새로운 악재다. 박근혜

정부는 지지 하락과 권력 누수 현상을 막고 정적을 약화시키려고 전임 이명박 측과 관련 기업주들을 사정하다가 후폭풍을 맞게 됐다. 이명박의 자원 외교 비리로 뒷조사를 당하던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이 친박 실세들에게 돈을 줬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전임 정권과 차별성을 그어 대중의 원성을 돌리려는 시도는 이렇듯 지배계급 내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집단 삭발도 불사하며 진실 규명 투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우파들은 세월호 참사 얘기가 “지겹다”는 여론을 만들려 무던히 애써 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5.2퍼센트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한국일보》).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 30여 곳이 구성된 ‘세월호대학

생대표자연석회의’가 4월 16일 도심 행진을 하기로 하는 등 대학가에서도 진실 규명 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반갑게도, 민주노총은 4월 18일에 전국 집중으로 여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를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우선한 체제가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의 목숨을 가버리며 여기며 빚어낸 비극이고, 이런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소수 지배자들은 참사의 진실을 은폐해 자신의 책임을 감추려 한다. 따라서 조직 노동자 운동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작업장 안전, 민영화 반대, 노동자 죽이기 반대 등)와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의 4·24총파업과 이후 투쟁들이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부양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나서자

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김문성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혜 정부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세월호 집회 한 참가자의 팻말이 신랄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전선이기 때문이다. 책임 규명은 조금이라도 참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법정 기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진실 파헤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셋째, 수사든 조사든 그 결과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광주 학살이 전두환 신군부의 짓인 것을 당연히 알았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전두환 노태우 구속과 유죄 판결로 광주항쟁은 ‘독재 정권의 민중 학살에 맞선 정당한 민중 저항’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인을 받았다. 오늘날 우파들은 이를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실 규명 기관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정부에 요구하지 말고 대중 스스로 진상 규명에 나서자는 주장은 일면적이다. 폐기가 아니라 문구 수정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타협하는 운동 내 일각의 태도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뿐이다.

정부 시행령(안) 폐기는

진실 규명을 향한 장도의 첫 발

박근혜가 대통령령인 특별법 시행령(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은 확실히 기습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 기습이 정권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항의 운동이 매우 빠르게 복귀되고 있다. 4월 4~5일 도보 행진과 마무리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도 정부 시행령(안) 반대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지지가 50~70퍼센트를 넘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분은 잠복해 있었을 뿐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격랑의 정국 속에서, 사람들의 원성을 살 사실들이 새롭게 폭로되거나 정권이 무리수를 두는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세월호 항의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한 〈노동자 연대〉(136호)의 예측이 옳았던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당시 〈노동자 연대〉는 불필요한 양보를 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끈질기게 싸우자고 주장했었다.

지금 4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민주노총도 세월호 참사 항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교조는 아예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저지를 위해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 투쟁 형태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시작한 “부패비리 발본색원” 작업은 김기춘, 허태열 등 친박 핵심 인사들로 불뚝이 튀었다. 이런 상황은 박근혜의 고통전가 공세와 세월호 진실 침몰시키기 공세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박근혜는 정부 시행령(안)을 쉽게 폐기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편에 유리한 여론과 집회 참가 등 행동 규모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있다.

따라서 요구안 후퇴가 아니라 유리한 요소를 이용해 운동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월호 문제가 민주노총의 파업과 연계돼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박근혜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를 통해 세력균형이 우리 편에 유리해지면, 정부 시행령(안) 강행도 어렵겠지만, 설사 이를 통과시켜도 다시 개정하거나 심지어 특별법 자체를 새로 만드는 운동을 자극할 수도 있다. 유가족은 물론 특별조사위 이석태 위원장도 불복종하고 싸우겠다고 투쟁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내 새끼를 낳고 키운 거냐?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부패한 우파 정부가 낳은 비극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배경,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수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이윤을 위해 객실을 늘리는 무리한 증축을 했고, 화물과적을 일삼았다. 이런 요인들 탓에 배의 복원력이 크게 나빠졌다.

직원 안전교육에는 인색한 청해진해운이 접대비에는 아낌없는 돈을 썼다.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윤 경쟁 체제 자체가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이 때문에 이 체제에서 경쟁유착, 부패와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체제는 소수 권력자에게는 이득을 보장하지만 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가 보여 준 비극적 교훈이다.

또한,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해경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만 봐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 구조대는 헬기가 없어 배가 가라앉은 뒤에야 도착했다. 서해 해경의 특공대는 민간 어선을 타고 2시간 뒤에 왔고, 해경 특수구조대는 김해공항, 목포공항을 거쳐 신고 5시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수색이 용이한 물때에는 정작 잠수를 시도하지 않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주제에 해군, 경찰, 미군의 도움도 죄다 거절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일부로서 안전예산 삭감과 규제완화가 이 비극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세월호 사고 직전에, 박근혜 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해양경찰청의 수색구조제(인명구조, 선박 좌초 전복 대처 등을 하던 부서)를 없애버렸다. 안전 장비와 구조 훈련에 돈을 안 쓴 것은 당연했다. 이런 국가에서 설사 사고는 우연이라 해도 참사는 필연이었던 것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마저 “처부술 원수”로 보는 박근혜가 자본가 계급 정치

조직의 수장인 상황에서 구조 실패는 국가 시스템상 준비된 무능이었다. 자본의 축적 드라이브와 국가의 무책임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는 운 나쁜 사람들의 우연한 불행이 아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불행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듯이 말이다.

이런 일들은 자본주의에서 국가 운영 전반과 사회의 우선순위가 기업 이윤 추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이윤이 영순위인 체제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은 낭비로 취급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안전 등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선박 운항이 경쟁 체제이므로 참사 이후에도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은 여전히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 …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4년간(2011년~14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7천5백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 문을 닫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 담화에서 박근혜가 흘린 눈물을 누구도 믿지 않듯이 말이다. 그가 단지 악독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다. 그가 한국 자본주의의 정치적 수장이어서다.

요컨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가장 앞세우는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낳은 비극이다. 노동계급의 고유의 힘, 즉 이윤 생산을 멈추는 ‘파업’은 일상적 시기에 지배자들을 물려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윤보다 생명을, 효율보다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 노동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한 민주노총의 방침이 말처럼 진행되길 바란다.



믿을 것은 정부가 아니라 부동진 우리의 연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뜨겁게 안고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자 결국 온전한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노사정위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개악 추진에 들러리를 서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방어선마저 양보한다면 소속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께 싸우자'는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공개적인 제안도 압박이 됐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문제에서는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을 당분간 잃게 됐다. 그동안 역대 우파 정부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반쪽짜리 합의'를 이용해 일정한 이득을 얻어 왔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결코 주춤하지 않는다.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예의 그 단호함과 사악함을 재확인시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노총과의 "공감대", "의견 접근"을 박근혜 정부가 정책 추진의 구실로 곁들이는 것은 그들의 치졸함과 함께 군색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떠났는데도,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내놓은 한국노총의 양보안을 이용해 입법 추진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노총과도 "시각차"가 명백했던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조차 정부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강행하려 한다. 기성 야당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입법 과정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공동투쟁 제안하기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방침에 맞서는 5~6월 파상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단호하게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일회성 투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명백하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4·24 총파업이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단지 정부에 경고를 보내거나 겁을 주려는 총파업은 무기력하게 끝나곤 했다. 최근 그리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긴축 반대 총파업들도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으로는 정부 정책을 물리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점에서 4·24 총파업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한층의 이후 투쟁을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 지속적인 투쟁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3월 28일 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활동가 30여 명이 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되려면, 4·24 총파업을 위한 조직하기는 단지 각 연맹별 파업 참가 가능치를 모으는 '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투쟁의 고비 국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쟁을 확대하고 고양시키는 '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가령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나오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을 밝힌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항의를 조직하고, 한국노총에도 공동투쟁을 제안해야 한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께 싸우자'고 했으니만큼 투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투쟁 규모를 확대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두 차례 대규모 집회로 산하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래고는 슬그머니 노사정위로 복귀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양대 노총 공동투쟁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구실을 하는 동시에, 과연 누가 더 일관되게 투쟁하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는지 입증할 기회가

4·24 총파업을 위한 조직하기는 단지 각 연맹별 파업 참가 가능치를 모으는 '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투쟁의 고비 국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쟁을 확대하고 고양시키는 '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12만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도 전국 집중 노동절 집회를 치를 예정이다. 만약 두 대열이 집회 후 행진해 도심에서 서로 만난다면 위력을 보여 줄 수 있고, 투쟁 확대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노조에 실무기구 탈퇴 촉구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지금, 공무원연금 개악에 어떻게 맞서느냐도 새삼 더욱 중요해졌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연결시켜 투쟁하겠다고 한 것은 옳다. 박근혜 정부가 두 개악 과제를 4월~5월 초 시한 내에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전선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대타협 모양새로 포장해 돌파구를 만들려는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공무원노조가 실무기구를 나오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의 목적이 노동단체를 개악 추진의 들러리로 세우려 할 뿐이라는 점이 노사정위에 서편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에서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해서 개악의 정도를 놓고 협상하는 기구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 단체들이 양보안을 낸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수치 계산을 내놨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이것이 여론 호도라고 항의했지만, 그 항의의사를 입증하려면 양보 의사를 공식

철회하고 실무기구를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가 한국노총과의 과거 "의견 접근"을 이용하고 있듯이, 공무원 단체들의 "고통분담 감수" 의사를 이용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고 있듯이,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해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공공연히 그러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나오면 공노총과 교총, 새정치연합을 견제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바깥에서 싸우면서 '나와서 함께 싸우자'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노총은 탈퇴 압력을 훨씬 덜 받았을 것이다. 실무기구 안에 머문다면, 과연 누가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또, 공노총과 새정치연합 등이 개악을 합의하더라도 공무원노조는 그것을 무로 돌리거나 크게 훼손시킬 만한 투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연한 걱정을 붙들여 매도 된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집행부가 실무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해서 '개악은 기정사실이 됐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전체 계급투쟁 상황을 보면, 결코 가능성이 닫힌 게 아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가 조성하는 기회가 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다 무리수를 둘 수 있는 데다, 세월호를 둘러싼 분노도 크다. 전교조 변성호 집행부는 올바르게도 공무원 단체들의 실무기구 참가를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활동가들은 이런 압력을 공무원노조 안으로 가져와서 투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대규모 집회가 성사된 것을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와 잠재력은 크다.

활동가들은 4·24 총투표 가결 선언이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래는 일회성 동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쟁으로 이어지도록 기층에서 조직해야 한다. 또,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결론이 정해져 있는 실무기구 내의 개악 협상에 매달리지 말고 한국노총처럼 결렬을 선언하고 나오라고 촉구해야 한다.

4·24 이후

박근혜 정부는 4월 국회에서(5월 6일까지)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연장 관련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악 추진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4·24 총파업과 노동절 이후의 투쟁 계획이 산별·연맹 차원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충분하다. 물론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 등이 쟁점과 직결된 노동조합들은 법 개악과 가이드라인 제정에 맞선 투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에서 이를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노총 한상균 지도부는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24 총파업은 선제적 파업이라는 의의가 큰데, 그것은 단지 낱자 문제가 아니다. 그 진정한 취지는 국회에서 의사가 내리쳐진 다음에 분풀이 용 행동으로 생색내지 않고, 사전에 개악을 막고 나서겠다는 데 있다. 4월 말 5월 초 개악 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그 취지에 걸맞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계획돼야 한다.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강동훈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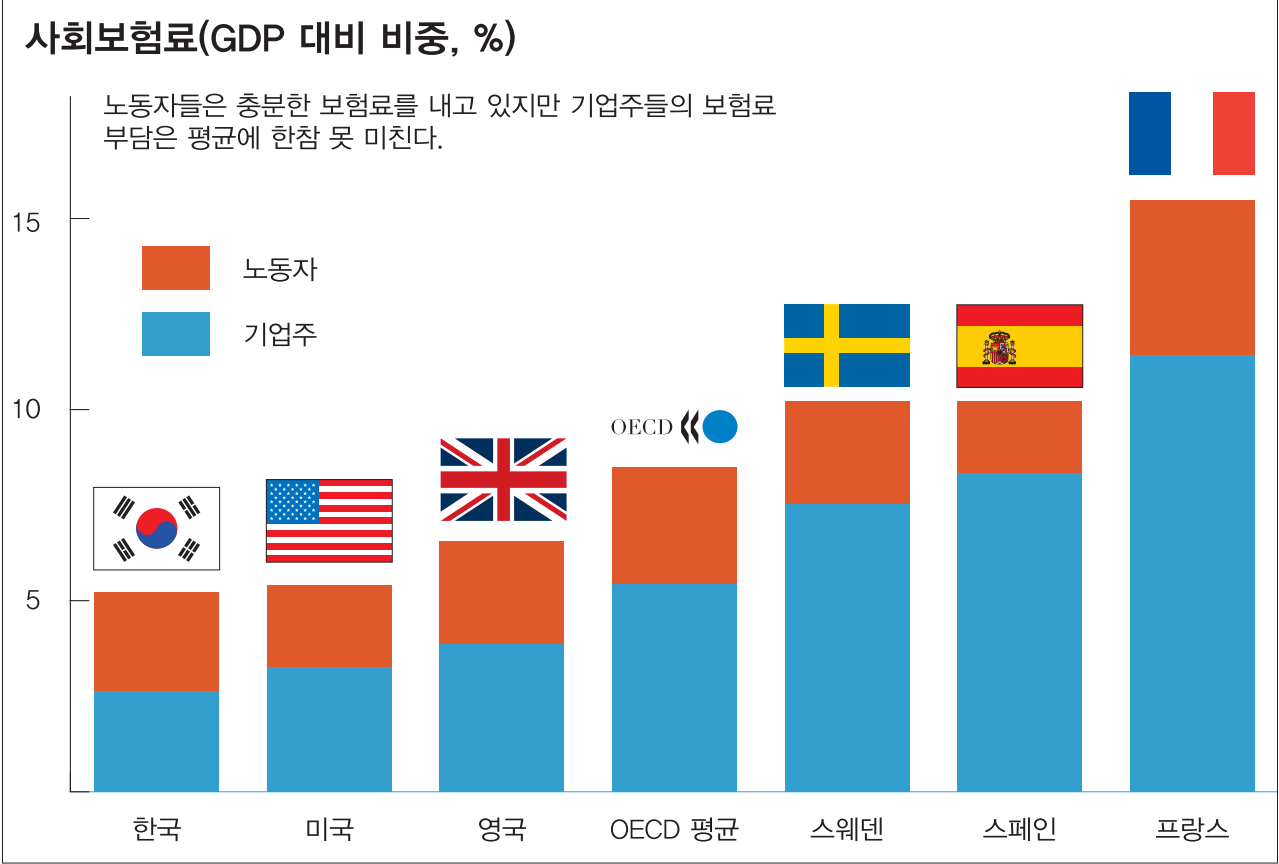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2014년 GDP 대비 10.4퍼센트로, OECD 평균인 22.4퍼센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평균치에 도달하려면 1백40조~1백50조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 부문에서 ‘부정 수급자’를 강도 높게 가려내는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더 나은 부적격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예를 들어, 2009년 1백57만 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현재 1백32만 명으로 25만 명이나 줄었다. 전체 인구의 3.1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준 것이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경제 공황 이후 급증한 한국의 빈곤인구는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7.6퍼센트이고, 상대빈곤율*도 14.6퍼센트나 된다.

그동안 정부가 가려낸 ‘부정 수급자’ 중 많은 재산을 숨겨두고 부정 수급을 한 사례는 극히 일부다. 대부분은 낮은 수급비 탓에 부정기적으로 일을 하거나, 부양 가족(자녀 등) 소득이 늘어난 것이



확인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중복 복지’도 통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쥐도 부족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 수당’을 중복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기초연금과 겹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50퍼센트에 육박한다. 노인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이 37.6퍼센트밖에 안 되고, 1인당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월평균 32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수 수당’으로 월 2만~5만 원

을 더 쥐도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복지마저 줄이겠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게다가 지자체들이 도입한 출산장려금이나 손주돌보미사업은 양육·보육수당과 겹친다며 삭감하려 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 단속과 예산 절감에 집중하면, 복지 수급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복지 공무원들도 복지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복지 지출을 줄이는 업무에 매달려야 한다. 현재 복지 공무

원 1인당 평균 5백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 삭감에 매달리면 더 많은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다.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복지 ‘누수 차단’을 명목으로 복지 차단에 나서는 이유는, 국가재정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29조 5천억 원으로 2013년보다 8조 4천억 원 늘어났다. GDP 대비로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0.5퍼센트 포인트 뛰었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어들어서다. 2014년 총세입은 고작 2퍼센트 는 데 그쳐, 경제성장률(3.3퍼센트)에도 못 미쳤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으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3.9퍼센트에 견주면 0.8퍼센트포인트나 낮다. 몇몇 금융기관들은 2퍼센트대 성장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올해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를 복지 구조조정으로 막으려 한다. 경기부양책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복지 지출은 ‘방만하다’며 최대한 억제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하면, 복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OECD 꼴찌 수준의 형편없는 복지와 수백만 명이 빈곤에 허덕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자 증세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절대빈곤율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가구의 비율.

상대빈곤율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인 가구 비율.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사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선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텅다는 불만이 들끓자, 정부는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급하더라도 상당수 노동자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친자본주의 언론뿐 아니라 온건 진보 언론도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에게도 증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정부의 소득세 개편 방안이 기본적으로 옳다며 여론의 압력 때문에 “소급적용한 것은 나쁜 선택”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정부의 소득세 개편 방안을 지지하며 “이미 징수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의당은 연금으로 월 1백67만 원 이상 받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정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지지한 바 있다. 퇴직 교사와 공무원에게 증세를 하는 방안이었는데도 말이다.

나도 낼 테니 너도 내냐?

심지어 노동당도 기관지에서 증세 논쟁을 다루면서 여러 필자들이 부자 증세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도 증세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도 증세에 동참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된 이유 하나는 이를 통해 “나(중간계층)도 낼 테니 너(부자)도 내라는 강력한 대중적 요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이 말을 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를 ‘중간계층’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소득 중간층

(40~60퍼센트)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상위 20퍼센트)의 3.1배에 달했다. 2008년 이후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유효세율은 0.46퍼센트 높아졌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퍼센트 낮아졌다.

그래서 2008년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3조 원이나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5조 원가량 더 많았다. 여기에다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까지 포함하면, 재벌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소득세와 소비세로 메우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이미 양보를 강요당해 왔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양보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배계급은 철저히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합리적” 정책이 보편적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책 행정가들이나 가질 만한 착각이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만으로는 재원을 다 확보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들에 게서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세금

을 더 내는 것이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부자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좋지 않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진정한 계급 분단선을 흐리고 노동계급 내의 차이를 과장해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는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라는 논리가 커질수록 저소득 노동자들은 고임금 노동자들이 세금 인상에 반대해 복지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은 돌아오는 복지 혜택은 별로 없는데도 자신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정한 격차는 계급 내에서도 아니라 계급 사이에 존재한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도 5백조 원이 넘는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에만 37조 원 늘었다.

반대로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007~2012년 2.3퍼센트 줄었다.

이런 진정한 격차를 줄이고 자본가들에게 세금 부담을 강제하려면 노동자 운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3년 철도 투쟁이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것처럼 노동자 투쟁은 이윤 체제를 뒤흔들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본가들은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하고, 이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에서조차 사실상, 고임금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물론 이런 복지와 하더라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 진정한 책임을 가리고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좌파라면 부자들의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소득세 누진율 강화를 주장하며 일관되게 부자 증세를 요구해야 한다. 당연히 부자 증세, 복지 확대를 이룰 진정한 동력인 단결된 노동자 계급 투쟁을 지향해야 한다.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이정원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전면 공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일부 ‘중점 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에도 2단계 ‘정상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는 전반적인 임금 삭감과 성과 경쟁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 불안을 낳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잘 조직된 공공부문 노조를 약화시키려고도 한다.

공공기관에서 임금체계가 개악되면, 민간부문에서도 기업주들이 훨씬 수월하게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정부는 자산 매각, 공기업의 ‘기능 조정’ 따위로 예들려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민영화와 다를 게 없다. 특히, 공항철도 매각과 신규 철도노선 운영권 매각,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유지보수 업무 사기업 이양 등은 그 자체로 민영화다.

정부는 민영화를 압박하기 위해 5년 이상 당기 손순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주식 양도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준에 서울대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들이 포함된다.



이미 시작된 공공부문 노동자 쪼어짜기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3월 18일 서울대병원 투쟁 승리 결의대회.

공공부문 노동조건 공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부문 ‘개혁’의 진정한 본질을 가리기 위해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을 ‘방만’, ‘과잉’, ‘비효율’의 표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2009년 한국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다른 부문보다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숙련도와 안정성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적은 인력으로 성과 내기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정원 감축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데, 정규직 정원이 줄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더 어려워지고 신규채용도 늘기 어렵다.

또, 총액인건비제로 인건비 증액이 가로막혀 필요한 업무가 있어도 정규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의 25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 노동자 둘 모두를 지켜야 한다. 경제 위기로 사람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교통·보건·복지 등 필수서비스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강동훈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도입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정상화’ 등으로 공공부문 공격에 열을 올렸던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공공부문 공격에 나

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재정적자의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가 당장 위기를 부를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하면서, 조세 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 반면 국가지출은 늘면서 나라 빚은 계속 늘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백조 원을 넘어 5백3조 원(GDP 대비 33.9퍼센트)이 됐다.

민영화

앞으로도 복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가파르게 늘 공산이 크다. 국가 경쟁력 면에서 보더라도 복지가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려면 양육수당 등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증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졌다. 국채 발행 증가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시중 금리가 올라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배자들 사이에서 복지 ‘누수’ 방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이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까닭이다.

이 맥락에서 경남지사 홍준표 같은 자들은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서서 자신을 우파의 대표 주자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들을 국가가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 이를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민영화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들에게 민영화는 한편으로는 국가

지출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 국내외 대자본들은 국유 부문에 돈벌이 기회가 없는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과 수천 가닥의 연줄로 연결된 국가 관료와 주류 정치인들은 이런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시 경전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이른바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기업들(특히 재벌그룹 건설회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상하수도 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물 민영화로 나아가는 길을 닦을 것이다.

또, 지배자들은 공기업들을 쪼개거나 통폐합하는 식의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공격함으로써 노동계급 전체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려 한다.

수출 경쟁력

한국 지배자들이 노동조건 공격에 열을 올리는 것은 특히 한국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크게 의존해 온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급히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은 이미 시작했다. 서울대·경북대 병원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해, 이를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 사측은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성과연봉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을 거세게 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철도, 서울대병원, 지하철 등은 공공부문의 주요 작업장으로,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공공성 방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성과 노동자 조건을 대립시키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공공성 방어 투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성 방어를 위해 자신감 있게 저항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영평가나 단협 개악 같은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 폐기 투쟁으로 결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에 맞서 노조들이 단결해 대응해야, 개별사업장이 정부의 경영평가 압박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노사정위 합의 결렬 이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과 금융노조 등에게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특위에서 나오라고 촉구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 노총 공조를 이유로 투쟁을 미뤄선 안 된다. 이는 지난해 1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 실패에서 끌어내야 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정상화’ 반대 투쟁을 되돌아보면, 조합원들이 싸울 의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양보교섭을 한 게 아니다. 철도노조와 한수원노조에서는 합의안이 부결돼 집행부가 사퇴하기도 했다. 여러 노조의 임원 선거 결과 집행부가 교체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양보교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꽤 컸다.

2단계 ‘정상화’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정면 공격하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위기감도 어느 때보다 크다. 공공부문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삼아 노동자들의 조건과 공공성 모두를 지키기 위한, 2단계 ‘정상화’ 반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정상화’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바로 이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민간부문 기업주들이 피고용인들에게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끝으로, 지배자들에게는 이데올로기적 필요도 중요하다. 지배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경제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책임 전가를 통해 시장과 경쟁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퍼뜨리려 한다.

위에서 언급된 공공부문 정책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삶을 공격하는 것들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민영화 등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끌어올릴 공간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를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새로이 책정(사실상 인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뒤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방안 발표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꺼냈다. 그래서 당시 〈노동자 연대〉는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구상이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노동자 연대〉 140호)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적자가 4천2백억 원, 시내버스 적자는 2천5백억 원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박원순 식 노동자 증세일 뿐이다.

지하철 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임수송이다.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비율이 전체의 30퍼센트를 넘어섰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국비 지원율을 줄여 온 정부를 비판하며 국가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노동자·서민에게 적자 부담을



지하철

전가시키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뛰어들 보험사들(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비롯한 국내 주요 보험사 열 곳)의 투자수익률이 향상돼, 보험사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제대로 된 표준원가(시내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검증과 원가 산정 공개도 없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감사원 발표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2013년 한 해에만 버스업체들에 2백1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서울시가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업체 66곳에 해마다 2천

서경지부 대학 분회들 임단협 잠정 합의

올해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올해 4월 파업을 예고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과 10일, 집단교섭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14곳 중 5곳(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광운대, 한성대)이 사측과 2015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미화직이 약 6퍼센트, 경비직이 4.4퍼센트 인상됐다(지난해 집단교섭 대학 기준).

한성대는 지난해 6월에 처음 노조를 만들었는데, 미화직의 경우 이번 합의로 임금이 30퍼센트가량 인상된다. 여러 대학의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걸고 함께하는 집단교섭이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경지부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임단협을 준비하며 일각에서는, ‘더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경지부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체 청소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서경지부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면서 해마다 두 자리 수 임금 인상률을 쟁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은 여전히 한국 노동자 평균임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시중노임단가(시급 6천9백45원)에도 못 미친다. 많은 노동자들이 단지 “용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외에도 이번 합의로 ‘신기술 도입 시 노조에 통보할 것’, ‘직장 내 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 및 금지’ 등 단협이 신설되거나 갱신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중요한 요구였던 고용 안정(고용승계 협약서, 신기술 도입이나 경영상

의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 등)은 관철시키지 못해 과제로 남았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잠정 합의안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엔 이 정도면 괜찮아. 고용 문제가 남았지만 그건 앞으로 계속 싸워야죠.”

총파업

지난해와 달리 노동자들이 본격적 파업에 나서기도 전에 사측이 양보한 것은 민주노총 4·24총파업의 좋은 효과인 듯하다. 노동자들은 올해도 이번 임단협 투쟁을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결시키며 조직했다.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4·24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4월 8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2015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전체 조합원이 참가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등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를 함께 외쳤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규직의 기득권 지키기 투쟁’으로 호도하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총파업 대열에 합류하면 갈라치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의 든든한 지원군인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결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이 경비 노동자들의 경고 파업 직전에 서둘러 양보안을 낸 듯하다.

한편, 이번 서경지부 투쟁에서 경비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발휘했다. 용역업체들이 경비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려 하자, 경비 노동자들이 단체로 교섭장에 들어가 ‘참관 시위’를 벌였다. 경비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4월 8~9일

억~3천억 원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업체들이 제출한 운송원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결국 버스준공영제가 사업주들의 배만 불러 준 셈이다. 서울시는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발생한 적자 책임을 요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서울 지하철노조 등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아직까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하철노조가 요금 인상 반대 등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며 박 시장을 비판한다면, 시민들의 더 커다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 절감에 박차를 가하며 복지 재정 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자·서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부채 감축의 능력을 보여 기성체제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박원순 시장과 같은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국정 수행 능력’을 입증하길 요구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중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일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이러한 박근혜의 복지 공격을 더한층 이롭게만 할 뿐이다. 요금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윤필언

에는 경고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7일에 타결돼 실제로는 연세대 경비 노동자들만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경비 노동자만 파업한 것은 처음인데 아주 호응이 좋아. 우리가 파업 선두에 서 있잖아. 북이랑 팽파리 줘 주니까 아주 신났어.”(연세대 경비 노동자)

지난해 말 ‘신현대아파트’ 투쟁으로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쟁점이 되면서 경비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서경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대학 작업장 대부분도 대체로 이 잠정 합의안 수준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버티는 대학들도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국제캠퍼스 청소·경비 노동자 23명과 연세세브란스빌딩의 시설관리 노동자 15명을 해고한 연세대는 신촌캠퍼스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9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전체 대학 예산에서 겨우 3퍼센트 차지하는 용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캠퍼스의 노동자들(전국여성노조 소속)과 신촌캠퍼스 노동자들(서경지부 소속)은 천막 농성, 시한부 파업 등을 벌이며 원청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연세대가 8월부터 총액 입찰제 도입하겠다고 한다. 2차 살인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냐.”

“치사하고 치졸하게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동결만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선다면 오산이다.”

서경지부는 연세대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지현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박찬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총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8면에 실린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 찬반투표를 방해했다.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탈취하고, 경찰을 배치해 투표소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투표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온갖 거짓말과 욕설, 몽둥이까지 휘두르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터진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악안과 도진 개진(오판에서 쓰는 말로, ‘도’의 거리에 있던 ‘개’의 거리에 있던 거기서 거기라는 뜻)인 안을 내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유승민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좋아한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언쟁을 벌였지만 결국 4월 23일까지 실무기구에서 단일 개

악안을 내놓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날로 예정된 파업에 재를 뿌리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과 다른 것은 공동에 대신 “실득하고 동의를 얻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여야가 모여서 합의한 실무기구의 성격은 분명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대안제로 수치만 조정하는 협상 기구인 것이다. 심지어 5월 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 내에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설사 실무기구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총파업 선언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무원노조 안팎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과 기층의 압력으로 최근 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리적으 공무원노조의 총투표를 방해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투표 방해에 맞서 총파업 “가결을 선언”하고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투쟁적 조합원들은 이층재 위원장의 총파업 선언을 미심쩍어

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들러리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에서 90일을 허비하고 ‘고통분담’까지 할 수 있다고 양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보를 전제로 한 실무기구에 참가하기로까지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놓이지 못하는 것을 더욱 이해할 만하다. 그들은 이층재 집행부의 말(총파업)과 행동(실무기구 참가)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파업으로 저지해야 한다”(공무원노조 성명)고 응답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연금 사수 의지는 강력하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왜곡과 이간질, 고통전기에 맞서 4월 24일 파업이 실질적인 파업이 되도록 기층에서 조직해야 한다. 이층재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렇게 하면 파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조합원들의 결의를 이끌어 내고, 총파업 실현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강화하고, 크고 작은 집회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회원과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하루 반나절 만에 자부자 2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현장 간부들을 모아 집행부에 투쟁을 촉구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당겨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자는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 이렇게 기층의 압력을 이층재 집행부에 전달해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이층재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거슬러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할 경우, 즉시 이를 무효화하고 투쟁을 이어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한편 4월 24일과 25일(법국민대회) 투쟁만으로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4월 24~25일 행동을 기반으로 (원래 예정됐던) 5월 1일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노동절 집회 때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커다란 지지를 받을 것이고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때 벌어졌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4월 16일 세월호 1년 항의행동을 시작으로 임시국회 만료시한인 5월 6일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소식지 〈연금 사수〉5호에 기고한 것을 약간만 다듬은 것이다.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장호철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낯익은 수법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은 국민연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매일 8백억 원씩’ 잠재부채가 늘어난다고 협박했다.

한국 정부의 한 해 복지 지출은 2013년 기준으로 1백45조 원(GDP의 10.2퍼센트)이다. 하루에 4천억 원씩 투입하는 셈이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자(와 유족) 36만여 명에게 이 정도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국가 부채 운운하는 것은 부활령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인구의 0.7퍼센트에게 복지 지출의 2퍼센트가 돌아가는 것을 불합리하게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니 다른 노동자들의 노후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기업주·부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고, 불필요한 군사력 유지에 낭비되는 지출을 줄여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Q 며칠 전부터 언론들은 지난해 국가 부채 증가분 93조 원 중 절반이 공무원연금 때문이라고 비난하는데 사실인가?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마치 자식을 낳자마자 앞으로 지출할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용까지 수억 원을 빚졌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에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될 뿐, ‘남비나 빚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지금 의무를 잘 경우 국민연금 총당부채도 계산상 수백조 원이 된다. 5백조 원이 기금으로 쌓여 있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2014년에는 국민연금도 정부가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삭제해 통과시켜 버렸다. 한마디로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노동절 집회 때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커다란 지지를 받을 것이고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때 벌어졌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4월 16일 세월호 1년 항의행동을 시작으로 임시국회 만료시한인 5월 6일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소식지 〈연금 사수〉5호에 기고한 것을 약간만 다듬은 것이다.

Q 복지 지출도 줄이는 편에 3백만 원이 넘는 연금은 좀 짊어주어야 하나?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 3백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5분의 1 정도다. 그조차 고위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교사를 일부가 이 정도 연금을 받는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공무원 노동자 대부분이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3백만 원이 큰 돈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 3백만 원가량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 일부를 깎는다고 다른 복지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박근혜는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노동자들 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고액 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면 결국 노동자들이 받는 연금 총액을 줄이는 효과만 낸다. 또, 얼마를 기준으로 얼마나 깎을지를 두고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간질에 맞서려면 일체의 후퇴를 거부하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소득 재분배는 노동자들이 받는 연금 총액을 늘리는 방식, 즉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보통 사람들은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살 이후에 지출한다. 청년 실업이 크게 늘어난 결과 교육비, 주택 구입비 등 청년층의 부담을 그 부모들이 분담한다. 3백만 원은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액수지만 왜 노동자들은 이를 누려선 안 되는가? 박근혜는 임기를 제대로 마칠 경우 매달 2천여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데 말이다.

Q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같은 제도에 포함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개악을 막거나 개선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통합인가가 핵심이다. 예컨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이 통합된 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이익이었다. 직장의료보험에서 남는 재정을 가난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 과정에서 정부 지원도 늘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일원화는 그 반대다. 먼저, 정부 지원을 대폭 줄인다. 또, 실질 소득대체율이 23퍼센트밖에 안 되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 한다. 공무원연금에서 삭감한 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추가 개악(보훈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예정된다. 빠른 것이라서 ‘군불 때기’가 시작됐다. 따라서 당장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장차 적당한 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요구해야 한다.

Q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이자는 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2013년 현재 65세 이상 공적 연금 수급자 2백29만 9천5백44명에게 공적 연금 월 평균수급액인 2백17만 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약 60조 원이 필요하다. 2013년 국민연금의 1년 수입이 48조 원이고 공무원연금 수입도 10조 원 정도 된다. 여기에 사학연금 수입 3조 원을 더하면 필요한 재정은 이미 견히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한쪽에 엄청난 기금을 쌓으면서도 노인들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퇴직은 60살 전에 하는데 연금은 65살부터 주는 것 도 말이 안 된다.

앞서 언급한 60조 원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해도 한국 정부의 공적 연금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강화하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현행 공무원연금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꿈같은 얘기는 아니다.

그 재원은 투자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사내유보금 등 기업주·부자들의 재산과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마련해야 한다.

Q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특위와 실무기구에서(그 이전의 대타협기구에서도) 공적 연금은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공적 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박근혜는 고작 2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기초연금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한 주범이고, 기초연금 먹튀에 합의해준 공범이기도 하다. 대타협기구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내었지만 공적 연금 강화안은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공적 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공무원노조 등을 대타협기구에 끌어들이고는 결국 도진개진[도전개전]으로 잘못 알려진 말을 바로잡았을 —《노동자 연대》신문 편집자인 개악안을 내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한다고 해서 공적 연금이 강화될 리 없다. 오히려 공적 연금 강화는 이런 개악을 막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실사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줄인 재정을 공적 연금에 지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원하는 돈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7퍼센트도 안 된다. 공적 연금을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만들 때기가 시작됐다. 따라서 당장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장차 적당한 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공적 연금 전체를 강화하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논리다.

Q 실무기구에서는 어떤 연을 논의하나? 김용하 안? 김연명 안?

새누리당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는다’ 안이다. 여기에 더해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더 깎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모두 65살로 늦춘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부 보전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매년 물가 인상을 볼 때 낮게 인상해 실질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도록 한다.

새정치연합이 대타협기구에 내놓은 안은 29퍼센트 더 내고 11퍼센트 덜 받는 안이다. 신규 공무원 차별은 없지만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5년 동안 연금 인상을 동결한다. 그러다 보니 퇴직수당을 인상하기로 한 새누리당 안과 큰 차이가 없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나 정부 지급 보증 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도 않았다.

지난해 처음 개악안을 내놓은 연금 확회 출신의 김용하는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로 실무기구에 참가하는데, ‘43퍼센트 더 내고 13퍼센트 덜 받는다’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재정 절감폭이 가장 크다. 그만큼 고통받는 폭이 크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 추천 전문가로 참가하는 김연명 교수는 43퍼센트 더 낼 수 있다고 했다. (기여율 10퍼센트) 이는 공투본이 “내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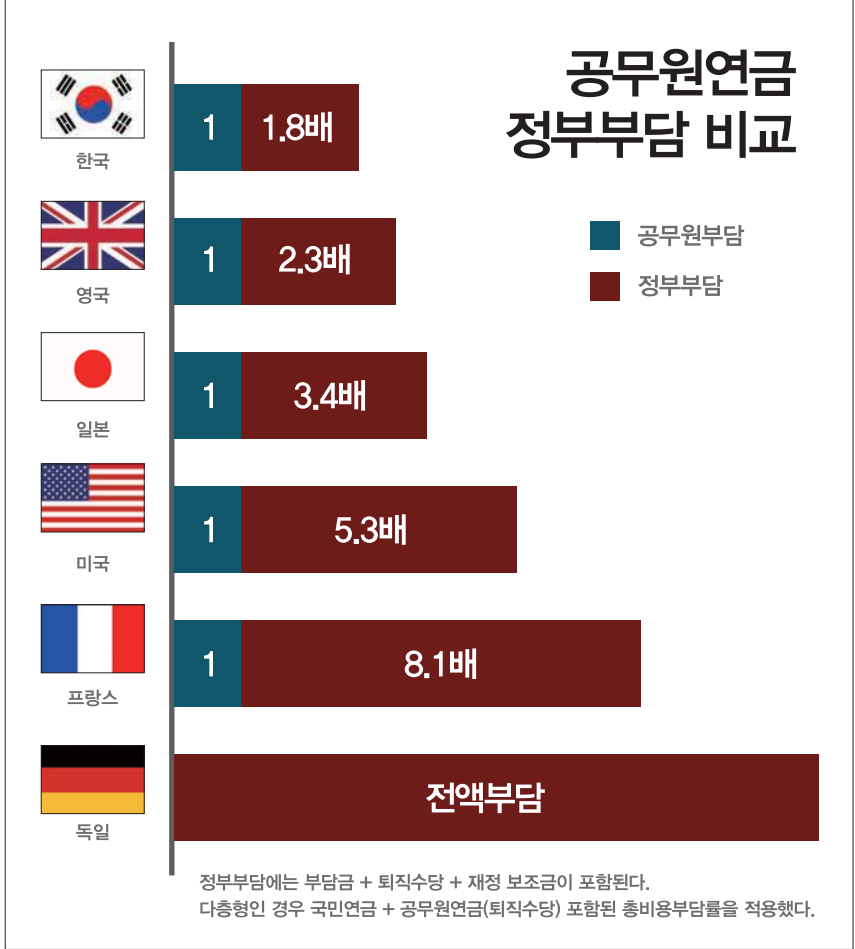
따라서 실무기구에서는 개악 여부가 아니라 개악의 폭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도 기여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하는 까닭이다.

Q 협상과 투쟁의 병행 전술이 효과적인 것 아닌가?

노동조합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지 못하는 노동자 투쟁이라면, 그 끝에는 모종의 협상이 있게 마련이므로 사회주의자들은 협상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이층재 집행부는 협상에 매달리고 있지,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협상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려면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을 강력하게 보여 줘야 한다. 따라서 협상과 투쟁에 똑같은 무게를 실을 수는 없다. 협상 중심의 논리는 투쟁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3월 28일 집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조원진은 “대타협을 거부해 내일 집회 있는 투쟁 날짜부터 바꾸세요” 하며 대타협기구를 만든 속내를 드러냈다.

또,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양보안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실제로 공무원노동자들은 양보를 전제로 실무기구에서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안을 두고 벌여지는 공세적 협상이 아니라 개악안



한국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는 이미지 없애고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

을 두고 벌이는 방어적 협상에서는 이런 압력이 더욱 크게 마련이다. 일반으로 말해, 협상 결과는 투쟁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같은 효과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여 주지 않는 한 협상만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양보를 전제로 한 교섭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투쟁 의지를 약화시켜 결국 더한층의 양보로 내몰릴 뿐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기여율 인상은 기정 사실화하고 수급액을, 얼마 깎을지만 논의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으려면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실질적 파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Q 파업하면 개악을 저지할 수 있나?

공무원 노동자들이 가진 잠재력만 보면 정부를 물러서게 할 힘이 충분히 있다. 파업은 정부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켜 커다란 압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2000년과 2004년에 이 힘을 보여 준 바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는 당시 노동조합 설립 물결과 결합된 강력한 투쟁에 부딪혀 실패했다. 오히려 이 투쟁의 성과로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도 코앞에 닥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냈다. 이 때문에 국민

공노총과 교총 지도부의 뒤공무니를 쫓으며 이들의 배신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거나 자기기만이다. 그나마 이들에게 좌파적 압력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전교조와 함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노총, 교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발판으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려 한다. 따라서 이 투쟁을 공공부문 공격에 맞선 더 광범한 투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도 4월 24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Q 실무기구에서 탈퇴하면 공노총과 교총이 합력하는 걸 막을 수 없지 않나?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똑같은 이유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지만 결국 공투본이 “고통분담” 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공노총과 교총을 견인하기는커녕 끌려다니며, 오히려 싸우자고 호소한 전교조만 따돌린 셈이다. 실무기구를 두고도 전교조는 밖에서 싸울 것을 호소했지만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결국 이를 뿌리치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단결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투쟁 속의 단결이 아니라 양보 교섭으로 우파적 단결을 추구한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어떤 진지한 논의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4월 24일 전까지 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도록 노조 지도자들의 발만 묶어 두면 된다는 생각인 듯하다.

공노총과 교총 지도부의 뒤공무니를 쫓으며 이들의 배신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거나 자기기만이다. 그나마 이들에게 좌파적 압력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전교조와 함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노총, 교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무수히 짓밟혔다.

정부 측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단속을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 질서 유지에 이용해 왔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한국여성단체 연합 소속 여성단체들이나 민주노동당 내 상당수 여성주의자들은 과거 윤락행위방지법에 견줘 큰 개선이라며 새 법을 환영했다. 과거보다 개선된 점은 있었지만, 성매매방지법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면서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은 미미했다. 성매매 알선업자나 포주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그 실효성은 미약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뒤 강화된 경찰 단속은 성매매 알선업자나 포주보다 성매매 여성들을 가장 큰 고통으로 내몰았다. 경찰과 관청, 주류 정치인들과 성매매 업주·포주의 뿌리 깊은 유착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포주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벌금형을 받아

다. 심지어 경찰에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혹이나 천지 등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므로 경찰 단속은 그 자체로 성매매 여성들을 옥죄는 엄청난 압박이다. 지배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더는 ‘윤락녀’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태도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단속을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 질서 유지에 이용해 왔다.

당시 경찰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합정단속을 벌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러나 단지 합정단속 같은 ‘무리한’ 방식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증거 채증을 이유로 나체 사진을 찍히고 경찰의 각종 협박에 시달리기 일췌

다. 심지어 경찰에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혹이나 천지 등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므로 경찰 단속은 그 자체로 성매매 여성들을 옥죄는 엄청난 압박이다. 지배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더는 ‘윤락녀’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태도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단속을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 질서 유지에 이용해 왔다.

대규모 빈곤과 불평등, 소외 등 성매매를 낳는 사회적 요인들은 놔둔 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속죄양 삼는 처벌 조항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

성구매자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여성주의자들은 대체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에 찬성한다. 이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 당사자 중 성판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성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법을 도입한 뒤 2009년 노르웨이,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이 모델이 채택됐다. (그래서 이제 ‘노르딕 모델’로도 불린다.) 지난 해 2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모델 지지자들은 성구매자 ‘몽치’도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지 말고 구매자와 알선업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스웨덴 모델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인

기가 높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서구의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모델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다. 1999년 세계 최초로 스웨덴에서 성매매 당사자 중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을 도입한 뒤 2009년 노르웨이,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이 모델이 채택됐다. (그래서 이제 ‘노르딕 모델’로도 불린다.) 지난 해 2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모델 지지자들은 성구매자 처벌이 성매매 수요를 줄여 성매매를 대폭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 그 증거는 별로 없다.

스웨덴 정부는 2010년에 낸 보고서에서 거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가 50퍼센트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 법으로 전체 성매매 여성 수가 감소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시인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늘었다는 것도 인정했다. 요컨대 거리에서 실내로 옮겨간 성매매가 얼마나 되는지 해 2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모델

스웨덴 모델이 성구매자 수를 줄였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 성구매자 수를 파악하는 정부 통계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체포와 공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구매가 억제됐을 수도 있지만, 처벌 위험이 성구매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많은 남성들이 해외에서 성을 구매하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의 금지 조치에 개의치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럿 발표했다. 스웨덴 정부도 2010년 보고서에서 성구매자들이 스웨덴 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성을 구매하는 것이 더 흔하다고 인정했다.

결국 스웨덴 모델의 뚜렷한 효과는 성매매를 주로 거리에서 몰아냈다는 것일 뿐이다. 전체 성매매 감소 효과는 불확실한 가운데, 성매매 음성화로 성매매 여성들이 더한층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스웨덴의 성매매 여성들은 성구매자 처벌로 성구매자들이 경찰 단속을 피해 낮설고 더 외진 곳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식 콘돔이 성구매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위험도가 커졌다

고 법안을 비판했다. 또,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이 원치 않아도 법정에 출두해 ‘고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비판한다.

성판매를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성구매 처벌로 인해 성매매가 더욱 은밀해진 것이다.

스웨덴 모델도 성매매 과정에서 발구매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구매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사회에 만연한 성구매 관행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식이 형사처벌

성구매 행위가 곧 남성의 강간이고

진정한 성 해방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하지만 성매매가 ‘여노 직업과 다를 바 없다’거나 심지어 일종의 ‘성 해방’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성매매 등 성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여노 직업에

서 일하는 여성들에 견줘 폭력이나 학대 등에 노출되기 더 쉽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소외와 불평등의 한 증상은 성매매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비롯한 착취와 차별, 소외의 복합적 결과물이므로 자본주의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국가 억압을 통해 성매매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그런 조처는 성판매자들을

더욱 힘든 조건으로 내몰 뿐 아니라 경찰 등 억압기관들을 정당화하고, 가족제도 옹호 등으로 사회 전반을 보수적으로 통제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행위 처벌에 반대한다고 해서 아예 포주와 알선업자까지 합법화해 성산업을 국

가가 관리하는 모델(독일, 네덜란드)이 대안인 것도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거대한 성 상품 시장이 형성돼 있고 빈곤과 실업, 복지 축소 등으로 성판매자들이 대규모로 계속 존재하는 한 성판매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법적 규정과 정책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일출할 수는 없다. (특정 모델을 이상화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을 속죄양 삼는 처벌 조항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의 법적 형태나 국가의 관리 방식이 어떻든

성매매가 여성들을 위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노동권’ 옹호자들도 성매매가 위험한 직업임을 인정한다.

성매매 합법화가 상당수 성매매 여성들에게 더 나은 처우를 가능하게 할지라도 성매매는 인간의 성이 스스로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인간관계와 성 의식을 왜곡한다는 점,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을 봐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가 광범하게 이뤄지는 현상이 여성을 알잡아 보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강화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적 대상

그저 여성들이 안전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회 건설이 노동계급과 여성들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 누구도 성매매 다른 이유로 성매매로 내몰리는 일이 없지 않는 사회,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성적 만족이 충족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

노동계급이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착취와 천대 모두에 맞서 싸우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지배계급의 권력을 분쇄할 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바탕을 두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도덕적 낙인 찍기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성매매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 자칭 ‘좌파’들은 신디컬리스트들의 실천이 강하게 묻어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초좌파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약점이 있었다.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 대한 지식 부족, 마르크스주의 강령을 적용해 본 경험의 일천함, 개혁주의에 반대하러 다 너무 지나쳐서 그만 종파주의로 빠지기, 전환적(이행기적) 강령이나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음, 동맹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대중이 혁명적 의식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선행 과

정들을 건너뛰려 하기. 불세비키는 초좌파주의의 전위를 노동계급 선진부위와 더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기는커녕 고립시킬 뿐이라고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막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수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그 노동자들이 혁명적 전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

다른 도덕주의를 부추기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형법권 강화에 이용돼, 지배자들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회집단들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데 이용되기 십상이다. 대중의 왜곡된 성 의식을 바꾸는 것은 억압적인 국가의 힘을 빌려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 평등의식 고양은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의 하사품이 아니라 모두 착취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투쟁하면서 사회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특히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투쟁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에서 찢든 온갖 정신적 오염을 떨쳐버리고 착취와 천대에 모두 사

노동조합 운동과 초좌파주의

오늘날 노동운동 안에는 좌파적 인사를 발탁한 실천으로는 조직노동자 운동의 당면 과제에 관여하려는 노력을 펼치는 종파주의자들이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4·24 총파업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나 고용·임금·노동시간 유연화 반대로는 ‘총파업을 할 수 없다면서 대뜸 “총파업이 단 한가지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한 달 넘게 “전망은 밝지 못하다”,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사 총파업이 잘 된다 해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반란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파업 조직에 재를 뿌리는 주장만 하는 초좌파들이 그들이다.

이처럼 좌파연하(하) 노동자 대중 운동을 꺾어내리며 현실 운동과 준별되는 자신만의 변별적 표지를 내세우는 것에 골몰하는 종파주의적 행태는 사실 국제 노동운동사에서 되풀이돼 왔다. 러시아 혁명의 승리에 공헌한 레닌(사진)도, 노동조합이 수구적이라고 비난하며 참여하기를 꺼린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 등지의 초좌파들과 논쟁해야 했다.

이 글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패럴 톨스**(1907~83)의 책 《혁명의 연속성 — 공산당 운동의 탄생 1918~22년》(미번역 도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초좌파들에 대한 레닌의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패럴 톨스**는 대공황 직후인 1934년 티스타스 파업을 이끌었고, 1953~72년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사무총장이었다. [>]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신로 편집자가 첨가한 말이다. 원로 번역은 **김종환** 기자가 했다.

불세비키는 기회주의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운동 내의 초좌파주의의 문제와도 씨름해야 했다. 불세비키는 기회주의와 싸울 때에는, 비교적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부패한 관료적이고 출세지향적인 개인들과 단호하게 단절했다. 그러나 초좌파주의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불세비키는 그들이 초좌파주의라는 명에서 치료돼 혁명적 노동자 운동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랐다.

이 자칭 ‘좌파’들은 신디컬리스트들의 실천이 강하게 묻어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초좌파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약점이 있었다.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 대한 지식 부족, 마르크스주의 강령을 적용해 본 경험의 일천함, 개혁주의에 반대하러 다 너무 지나쳐서 그만 종파주의로 빠지기, 전환적(이행기적) 강령이나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음, 동맹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대중이 혁명적 의식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선행 과

정들을 건너뛰려 하기. 불세비키는 초좌파주의의 전위를 노동계급 선진부위와 더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기는커녕 고립시킬 뿐이라고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막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수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그 노동자들이 혁명적 전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



이 혁명적 전망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몸소 정치적 경험을 해야 한다. 공산당원들은 함께 그 경험을 해야 하고, 오직 그럼으로써만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입지에 오를 수 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노동운동 내 개혁주의자·종간주의자들의 배신적 구실을 만천하에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혁명가들이 프롤레타리아 대중 조직에서 리더십을 인정받는 길을 터줄 수 있다.

레닌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만연한 혁명적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익혀야 할 전략과 전술을 자세히 설명했다. 레닌의 견해는 그의 책 《좌파》 공산주의처럼 좌파연하(하) 노동자 대중 운동을 꺾어내리며 현실 운동과 준별되는 자신만의 변별적 표지를 내세우는 것에 골몰하

는 종파주의적 행태는 사실 국제 노동운동사에서 되풀이돼 왔다. 러시아 혁명의 승리에 공헌한 레닌(사진)도, 노동조합이 수구적이라고 비난하며 참여하기를 꺼린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 등지의 초좌파들과 논쟁해야 했다.

이 글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패럴 톨스**(1907~83)의 책 《혁명의 연속성 — 공산당 운동의 탄생 1918~22년》(미번역 도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초좌파들에 대한 레닌의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패럴 톨스**는 대공황 직후인 1934년 티스타스 파업을 이끌었고, 1953~72년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사무총장이었다. [>]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신로 편집자가 첨가한 말이다. 원로 번역은 **김종환** 기자가 했다.

이처럼 노동자 대중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행동 지침은 재앙으로 이끌 뿐이라고 레닌은 지적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멍청한 실수다. …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부르주아자에게 한낱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나 다름 없다. …

“반동적인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의식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의식 발전이 더딘 노동자 대중을 반동적 지도자들, 부르주아지의 앞잡이들, 노동귀족들의 손에 내맡기는 셈이다.”

레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랏을 막론하고 노동조합 관료들은 “독일의 ‘원칙적 반대파’나(신이며, 이따위 원칙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반동적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고 주장하며 그런 노조 안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미국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 내 일부 혁명가들 같은 ‘좌파’ 혁명가들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레닌은 “좌파” 공산주의자들에 반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공산주의자의 과제는 의식 발전이 더딘 인자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지, 부자연스럽고 유치한 ‘좌파적’ 구조로 그들과 자신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공산당은 당 간부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관여하는 것을 정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공산당원들은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과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과 몸소 협력할 수 있고, 그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노동자들이 혁명적 전망을 받아들이도록 이끌 수 있다.

합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기, 정치적 정점들에서 공식적으로 “중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정책을 사실상 뒷받침하기, 노동조합의 행동이 부르주아 정치권력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조합 내에서 이런 계급 협조적 관점에 맞서며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잘 포착하지 못했다.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기존 노동조합에는 무조건 반대하며 새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자고만 주장했다.

기존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하기

레닌은 독일의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발행한 소책자에서 그들의 다음 말을 인용했다.

“혁명가들은 모두 공장 조직에 기초를 둔 노동자연합(Workers’ Union)으로 결집해야 한다. … 노동자 연합은 다음과 같은 구호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결속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을 떠나자!’ 전투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바로 노동자 연합으로 기층 노동자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계급 투쟁, 평의회 체제, [노동자] 독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자 연합의 가임 조건이다.”

이처럼 노동자 대중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행동 지침은 재앙으로 이끌 뿐이라고 레닌은 지적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멍청한 실수다. …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부르주아에게 한낱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나 다름 없다. …

“반동적인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의식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의식 발전이 더딘 노동자 대중을 반동적 지도자들, 부르주아지의 앞잡이들, 노동귀족들의 손에 내맡기는 셈이다.”

레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랏을 막론하고 노동조합 관료들은 “독일의 ‘원칙적 반대파’나(신이며, 이따위 원칙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반동적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고 주장하며 그런 노조 안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미국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 내 일부 혁명가들 같은 ‘좌파’ 혁명가들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레닌은 “좌파” 공산주의자들에 반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공산주의자의 과제는 의식 발전이 더딘 인자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지, 부자연스럽고 유치한 ‘좌파적’ 구조로 그들과 자신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공산당은 당 간부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관여하는 것을 정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공산당원들은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과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과 몸소 협력할 수 있고, 그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노동자들이 혁명적 전망을 받아들이도록 이끌 수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시리자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시리자 정부에 가혹한 타협을 강요하면서 긴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런 분노는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코스타스 피타스가 말한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그리스 개발부 공무원 노조의 사무국장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안타르시아 회원이다.

1월 25일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 파업·점거·광장 시위를 비롯한 5년간의 투쟁 끝에, 긴축 양해각서를 따르는 정부가 무너지고 좌파 정당이 집권했다. 시리자 장관들은 이런 낙관을 복돋았다. 특히 정리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직, 민영화 중단, 이주민 수용소 폐쇄 등을 약속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좀 달라 보인다. 2월 20일 시리자 정부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의체]과 맺은 합의안은 긴축을 연장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린 것이었다. 그 합의는 시리자를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망을 낳았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좌파를 당선시킨 노동계급 운동의 경험·자신감·급진성은 매우 강력해,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현재 트로이카(유럽연합·IMF·유럽중앙은행)의 협박에 맞서 “자신들의” 정부시리자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지배계급 정당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고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이 점

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시리자에 투표한 이유는 시리자가 친유럽연합 노선이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난 5년간 도둑맞은 것을 되찾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런 바람은 시리자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다. 따라서 트로이카가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분노한다. 이런 분노는 시리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유로그룹과 합의한 이후 몇 주간 트로이카의 압력은 더 거세졌다. 유럽의 언론과 TV뉴스는 시리자 정부에 대한 협박과 공격으로 가득했다. 긴축을 강요하는 세력들은 그리스 선거 결과에 몹시 화를 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의 좌선화를 의미하고 그 메시지가 다른 나라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 이 메시지를 지우려 하고 시리자 정부가 긴축을 이어가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그들은 트로이카와 합의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한두 달 동안 월급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까지 요구했다!

3월 14일 그리스 재무부 장관 아니스 바루파키스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실무 회담에서 “시리자 정부는 모든 공약을 유예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동과 사회 보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과거 친긴축 정부에 맞서 투쟁한 공영방송 ERT와 비오메(Vio.Me) 노동자들, 재무부 청소년노조, 해직 교사 등이 시리자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시위를 벌였다. 4월 6일 아테네.

거듭 타협한 시리자

시리자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9월 시리자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시리자가 집권하면 교섭 결과와 상관없이 양해각서 집행을 당장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대부분의 부채를 놓고 “헤어컷”[부분적 부채 탕감] 교섭을 벌이고, 남은 부채도 경제가 성장할 때만 갚는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했다. “유예 기간”을 요구해 은행 저축을 경제 성장에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올해 2월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조를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다: 양해각서 조항의 70퍼센트는 인정할 수 있다. 부채를 일부 줄이고 채권으로 바꾸어 한다. 모든 채무국이 참가하는 국제 회담을 열어야 한다. 시리자가 일부 공약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간 긴축 정책 없는 지급 유예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급유예는 건너뛰고 시리자 정부는 트로이카의 가치없는 감시 속에 양해각서 내용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기한 내”에 모든 부채를 채무자들에게 갚겠다고 서명했다. 국제 회담에 대한 논의는 전부 삭제됐다. 어떠한 행동도 [트로이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트로이카는 이 합의로 만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그 밖의 다른 유럽 지배자들의 압력은 더 커졌다. 두 번째 유로그룹 회담에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결정됐다.

이 모든 타협은 실질적인 후퇴로 이어졌다. 지난 9월 치프라스는 [긴축 정책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첫 기본 조치를 취하는 데 20억 유로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는 그 비용이 2억 유로로 줄었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IMF에 지불할 3월 분납금을 마련하는 데 노동자들의 연금 기금을 사용했다.

공영방송국 ERT의 운영 재개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에 턱없이 못 미친다. 법안에 따르면 “ERT” 재개 문제는 배지 상테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ERT 직원을 획일적 기준

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점거와 시위에 참가하고 방축을 노동자 통제에 두고 시리자를 집권시킨 운동을 지지한 압도 다수 노동자들과, 긴축 시행 정부가 ERT 폐쇄 후 만든) 새 국영 TV에 일하려고 지원했던 파업 파파자들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과 노동조건은 어떤지, 그리스 전역의 모든 라디오와 TV 방송 지국 운영을 재개할 것인지를 포함해 많은 것들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단연 가장 큰 문제 하나는 ERT의 관리 구조를 다른 민간 TV방송국과 똑같이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어떤 정책 결정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RT 노동조합은 새 법안 수용을 거부했다.

시리자는 최저임금을 즉각 7백51유로[89만 원]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도 2016년 말로 연기됐다.

결론을 말하자면, 긴축 정책은 조금 더 치도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리자는 향후 석 달 동안 그리스가 유럽연합의 엄격한 예산 규정을 지키고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압력에 놓여 있다.

시리자 내 “공식” 반대파의 한계

운동의 좌파적 동력은 선거 이후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졌다. 치프라스 지도부는 시작부터 원쑤의 압력에 놓여 있었다. 유로그룹과의 협상 기간에 국회 반대편 신타그마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시리자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보다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자 한 것이 두드러졌다.

바루파키스가 합의안에 서명했을 때, 그 타협에 항의해 최초로 시위를 조직한 것은 혁명적좌파연합 안타르시아였고, 공산당(KKE)이 그 뒤를 이었다. 시리자의 당내 좌파 의견그룹 연합(이하 레프트플랫폼) 주변의 좌파 의원들과 중앙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나왔다.

직장과 대학 등지의 시리자 당원이나 지지자들과, 당 내부의 “공식” 반대파 레프트플랫폼 사이

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레프트플랫폼이 많은 점에서 “좌파적 애국주의”의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말이다. 진짜 차이는 레프트플랫폼이 시리자보다 좌파적인 정치세력의 일부로 보일 만한 행동을 일절 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 그것도 아주 온건하고 조심스럽게 — 행동에 나서기는 거부한다.

3월 21일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가 좋은 예다. [이날 시위를 국제적으로 처음 호소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압력은 몹시 커서 시리자와 레프트플랫폼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회 당일 아테네에서 시리자는 2시간 일찍, 다른 광장에서 집회를 따로 열었고 겨우 5백 명가량 모였다. 반면에 KEERFA의 행진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공동전선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리스 서부 파트라스 시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시리자 청년·직장 조직들이 안타르시아, KEERFA,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함께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내가 속한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공산당, 시리자, 안타르시아 당원 모두가 KEERFA 시위를 지지했다.

교사 노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도부에 속한 시리자 레프트플랫폼 당원들은 3월 21일에 시리자가 [따로] 주최한 집회를 지지했다. 그러나 아테네의 여러 지회 간부들은 시리자 지지자들, 공산당 지지자들, 안타르시아 지지자들 만장일치로 KEERFA 시위를 지지했다.

상층과 기층 모두에서 공동전선 전술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를 주야장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 공산당이 그러다 — 시리자 당원들과 공동 행동을 건설할 수 있다.

직장과 조직 노동자 운동 속에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명백히 있다. 해직 교사들은 정부 각료가 “(복직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자 항의시위를 하고 국회를 포위하기로 했다. 대학 행정직들은 일을 멈추고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노총(ADEDY)과 시형노조(POEOT)는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양해각서로 인한 문제 일체의 해결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갔다. 그들은 즉각적인 부채 탕감도 요구했다.

공공부문

이 글을 쓰는 지금, 공공부문노총 지도부는 몇 주 안에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하루 ‘행동의 날’을 조직하라는 압력을 소속 노조들로부터 받고 있다. 3월 11일에는 여러 병원에서 노동자 집회가 열렸고, 일부에서는 일을 멈추

고 보건부 앞 시위에 참가했다.

부두 노동조합은 피레우스 항만의 민영화가 계속 진행되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 19일 아테네 지하철 노동자들은 3시간 파업에 들어가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총회를 열었다. 3시간 동안 어떤 지하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능동적인 정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한 공공부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첫 주에 민간 휴대폰기업(윈드, 보다폰, 포스넷) 노동자들이 신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사용자의 전화를 끝내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에게 해(해) 제도에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의 선원들은 몇 차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러 대형마트에서 일어났고, 코카콜라 공장 등 직장 폐쇄에 맞선 투쟁도 선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이런 움직임은 단지 경제적 요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쟁점도 있다. 아테네 아미그달레자 이주민 수용소에서 반란이 일어난 후, 시리자는 수용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감자들의 석방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조건이 따라붙고 있다. 또한, 다른 이주민 수용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없다. 공공질서부 장관(중도좌파인 민주좌파당 당원)은 터키와 맞닿는 북동부 국경에 이

주민을 막기 위해 세운 “수치심의 장벽”을 계속 유지하고, 아테네 중심지에서 특별 경찰 순찰대를 이용한 이주민 검거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치인 황금새벽당 지도부의 살인 사건 공판(4월 20일에 시작)을 한 달 남기고 국회의장인 시리자의 한 지도적 의원은 “[황금새벽당은] 합법 정당입니다” 수감된 황금새벽당 의원들에 게 의정 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지난 정부들이 취

한 인종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파시스트 처벌조차 가로막는 법치가 대체 무엇을 위한 법치냐며 크게 분노했다.

선거 후 KEERFA는 이주민 수용소 주변과 아테네 중심지에서 시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운동의 상승세를 보여 준 것은 3월 21일 아테네 등 그리스의 네 도시에서 개최된 반파시즘 집회에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대거 참가한 것이다.

혁명가들의 과제: 말만 해서는 안 된다

1월 25일 시리자의 당선은 그리스 노동운동과 좌파들의 조건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시기는 막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희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희망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혁명가들의 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리자가 유로그룹과 합의한 후, 부채 탕감과 [트로이카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직장에서 활발해졌고, 이런 토론은 흔히 “개월이나 혁명이나” 하는 양자택일 문제로 이어진다. 나는 개발부 산하 산업부처에서 일하는 데 노조 회의에서는 해고된 동료들을 어떻게 복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 시작된 토론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것인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노동자 통제가 필요한지 타협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으로 나아간다.

혁명가는 그저 시리자의 타협을 줄

곧 비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분명한 단계가 있다. 첫째, 분명한 정책 대안을 통해 노동계급의 투쟁과 그들의 희망에 분명한 앞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채 탕감과 [IMF 등] 채무 지급 중단, 트로이카·유로화와의 단절, 노동자 통제 하에서의 은행 국유화, 민영화 중단과 민영화된 거대 국영기업 일체의 재국유화, 해고 금지, 인종차별과 파시즘 분쇄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정책들이다.

행동과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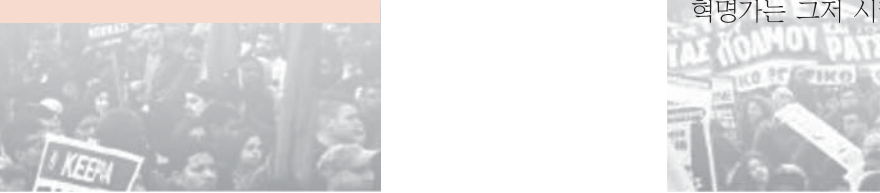
둘째, 혁명가는 좌파 정부의 구실에 환상을 가진 노동자들과 모든 경제적·정치적 투쟁에서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리자에 투표한 수많은 투사들과의 공동행동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이들의 다수는 안타르시아를 정부의 후퇴와 타협에 맞서 자신들을 지지해 줄 정치세력으로 여긴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혁명가는 지

실할 수 있는 독자적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데 주도권을 발휘하고 반자본주의 강령에 따른 요구를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안타르시아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하려는 구실이다. 이는 전혀 종파주의가 아니다. 트로이카와 긴축에 맞서 대안과 행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현실로부터 이런 과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혁명가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일자를 뒤엎고, 공공서비스를 재개하고, 인종차별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반자본주의 정치로 노동자 통제라는 쟁점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스 전역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수준 높은 정치 토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 제기된다. 토론의 수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에서 좌파 정권이 이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4월호 / 번역 최병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김지태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징계해고, 계약해지, 고용승계 거부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 지난해 파업을 비롯해 사내하청지회가 벌인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절망 퇴직'을 신청하도록 압박했고 실제 1백66명을 해고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원청 사측이 일방적으로 기성(하청에 지급하는 비용)을 삭감해 임금 체불·삭감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부터 1만 명에 가까운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해고됐다.

사측은 조선업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투쟁을 호소하는 사내하청지회가 사측에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해고된 조합원들은 곳곳이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저희는 단지 바르게 행동하고 옳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해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순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함께 싸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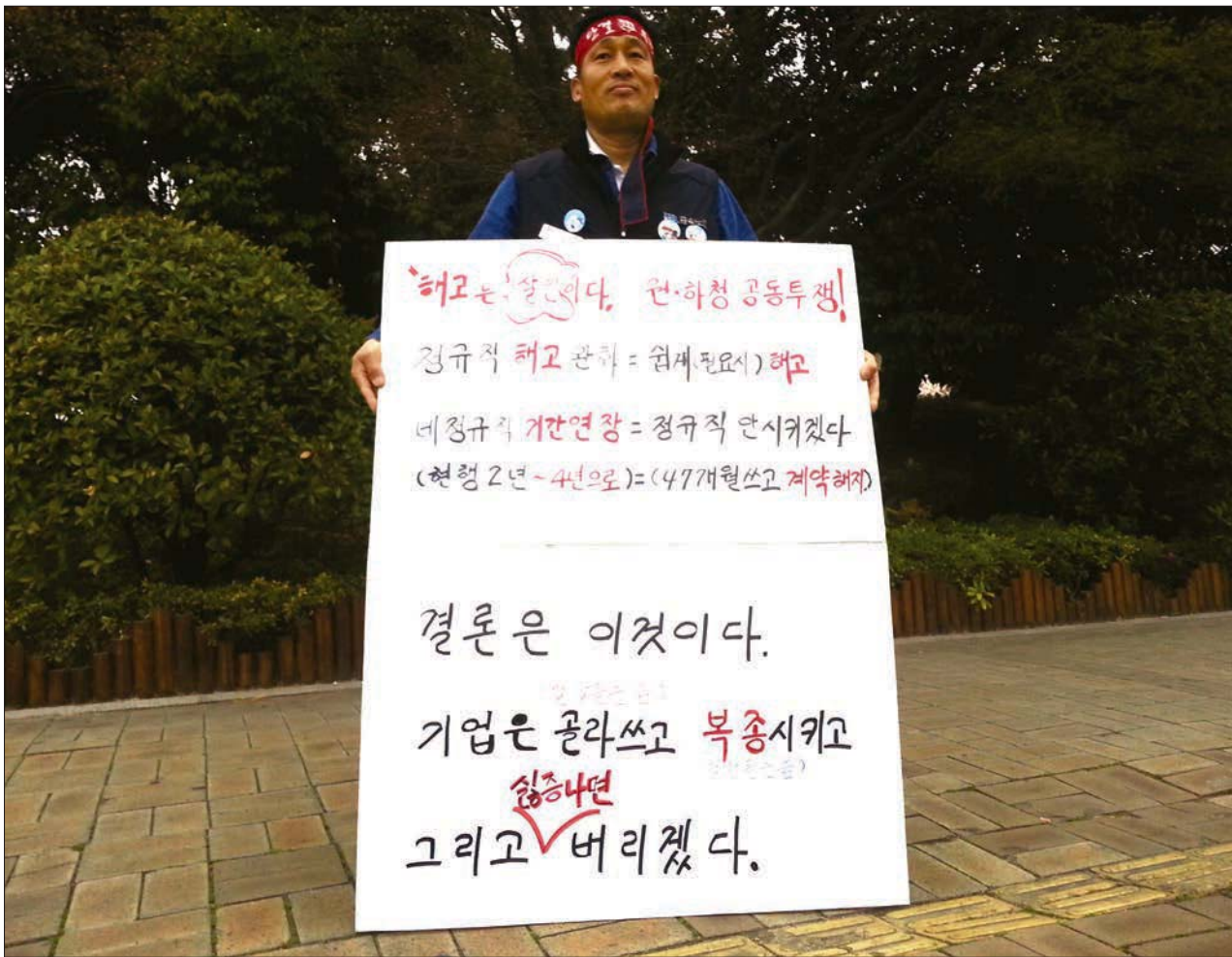
이번에 해고된 사내하청지회 김채삼 조직부장은 이 투쟁에 대한 지지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출퇴근 홍보전을 하고 있으면 힘 내라는 노동자나 정규직 활동가들을 만나요. 그럼 힘이 나죠.”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다. 올해 초에는 정규직 활동가들과 함께 투쟁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한 명의 해고를 철회시키기도 했다.

김채삼 조직부장은 투쟁 결의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파업할 때 어느 정도 징계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해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끝까지 싸울 겁니다.”



“부당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김채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

독자편지

4월 21일(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홍익대 방문한 황우여의 황당한 학생 상담

위선적인 상담 말고 교육여건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 늘려라

4월 9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에서 청년버스 출정식이 진행됐다. 청년버스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열 두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가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대형 버스로 전국을 돌며 취업, 창업, 해외진출, 대출 관련 1대1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날 학생 1백2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행사에 참가한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여는 말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도 취업에 맞춰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학은 인문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점점 기업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등학교까지 취업을 위한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학문이나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보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부 장관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눠 주는 순서가 지나고 황우여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용환이 학생 6명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황우여와 신용환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황우여는 “직장하고 대학의 교육을 딱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고 신용환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아야 한

다고 불만이 있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학을 기업 입맛에 맞게 취업 양성소로 만드는 것과 학생들이 기업 맞춤형 인간이 되는 방향을 강조한 것이다.

신용환은 “내가 회사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길러 스킬, 길러 콘텐츠즈 만들어 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도 너무 많은 스펙 쌓기가 버거운 학생들에게 더한층 부담을 주는 것이다. 오죽하면 취업 9종 세트(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입상, 인턴, 봉사활동, 성형)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를 하는 신입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학생들이 겪는 고통이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는 듯했다.

현미경 나눠 쓰기?

또 “학교에 실습도구가 부족하다. 낡고 오래돼 실습을 하기 어렵다”는 학생의 토로에 황우여는 “모든 대학이 똑같은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신촌 지역만 해도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가 있는데 세 대학 모두에 현미경이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 홍익대에는 현미경, 이화여대에는 망원경,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기자재를 하나씩 갖추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말이지 웃음밖에 안 나왔다. 지금 대학의 기자재는 그 대학 소속 학생에게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 당

국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자재를 구비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홍익대는 적립금이 6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 미술대학은 학생들의 실습공간이 부족하고, 환기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전임 교수가 부족하다. 다른 과도 실습도구가 낡고 대부분 고장나 있어 제대로 된 실습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기자재를 여러 대학이 공유해야 한다니, 현실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다.

이 날 청년버스에서 황우여와 신용환이 한 말은 한마디로 ‘청년들이 힘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라’는 것이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청년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그래법’으로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정규직의 임금을 깎는 것은 정규직이 될 청년들의 임금을 결국 깎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무슨 학생들의 고통을 상담할 자격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은 홍익대 학생



4월 2일 강원도교육청 앞 학교비정규직 집회.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라

지난 4월 2일 강원도교육청 앞에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이 모였다. 강원도교육청이 노동자들에게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고, 처우 개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은 노동자들에게 급식비 8만 원 지급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시작된 교섭에서 교육청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기로 했던 8만 원에서 한참 후퇴한 5만 원을, 그것도 업종에 따라 차별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안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도교육청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30일부터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난 선거에서 노조와 정책 협약까지 맺었다. 평소 우리는 한가족이라고 이야기했던 민병희 교육감의 태도에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물품을 빼앗고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도 저질렀다. 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강원지부장은 “음식물 반입을 막고 로비의 불을 껐다. 캄캄한 밤에 불 꺼진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던 그날은 여성으로서 무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성과상여금 1백만 원 지급과 공통 임금 지급 등 4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월 16~17일에 파업을 하고, 도교육청이 계속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민주노총 총파업인 4월 24일 다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날 집회에서 두 노조 지부장은 함께 손을 잡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그러자 노동자들도 모두 뒤섞여 손을 마주 잡고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 투쟁을 선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홍현우 노동자연대 강원총부지회 회원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2008년 경제 공황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긴장도 심화됐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충돌도 이 맥락 속에 자리 잡은 사건들이다.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평화주의 사상도 그 청중을 넓히고 있는 듯하다. **김영익** 기자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특히 트로츠키의 사상에 비추어 평화주의 사상과 운동의 한계를 짚어 본다.

2000년대 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 반전평화 운동이 성장했을 때, 반전평화 운동 참가자 다수가 공유하던 정치와 정서는 평화주의였다. 당시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도 평화주의적 정서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진보진영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물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나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평화주의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평화주의 운동가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이나 한국 기업의 무기 수출 반대 운동 등에서 군사주의를 폭로하고 비판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다.

평화주의는 스펙트럼이 넓지만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평화주의는 모든 생명이 신성한 것이라며 일체의 폭력을 거부한다. 그리고 군사주의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떼어내 따로 다루므로, “합리적 이성” 같은 추상적·절대적 도덕에 기대고, 계급투쟁이 아니라 인류애에 호소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폭력 없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상을 평화주의자들과 공유하지만, 궁극으로 그 이상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터지자, 유럽 좌파 다수는 국제 관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논리에 따라 조정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트로츠키는 이것이 평화주의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트로츠키의 공헌

1917년 트로츠키는 평화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주의는 사회 현상의 겉모습만을 비판할 뿐, 더 깊이 파고들어 그 현상의 근저에 놓인 경제적 원인까지 보려 하지는 않는다.” 즉, 평화주의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 폭력을 반대하지만, 그 폭력의 근원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한다.

평화주의는 ‘이성의 조화에 바탕을 둔 영속적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개별 자본가와 개별 자본주의 국가는 나름 ‘합리적’으로 행동하겠지만, 그 전체의 조합은 경쟁 논리 때문에 전혀 합리적일 수 없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중세 시대에는 꿈도 못 꾸 엄청난 파괴 수단들을 쌓았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과 계급 간 적대는 그 경제적 원인이 같다. 즉, 이윤 획득을 위한 경쟁적 축적의 논리가 계급 간 적대를 낳고 또한 국가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평화주의 논리처럼 “계급투쟁을 진정시켜 점차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당연히 국가들 사이의 갈등



평화를 향한 강력한 염원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노동자 계급투쟁과 만나야 한다 지난 1월 3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강정 마을 망루 위에서 저항하는 평화 활동가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투쟁은 결국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오늘날 전쟁과 파괴를 낳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 조절하고 진정시켜 점차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이론적·정치적으로 평화주의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과 그 기초가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고 서로 화해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제국주의 경쟁도 사라지지 않는다.

트로츠키는 평화주의의 핵심 계급 기반이 중간계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전쟁을 두려워하는 중간계급이 왜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자본가들을 막지 못하는지 설명했다.

“해외 차관, 식민지, 러시아·영국과의 동맹 때문에 [프랑스] 상류층은 세계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와 갈등에 얽히게 됐다. … 반면 프랑스 중간계급은 평생 전쟁을 염청나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중간계급은 급진당의 부르주아를 자신들의 대표로 의회에 보낸다. 그 부르주아 양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믿고 말이다. ‘나는 두 가지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첫째, 국제연맹. 둘째, 러시아 카자크를 시켜 독일 황제의 목을 치게 하겠다.’

“[그러나] 그 ‘급진당 평화주의’의 원들은 … 파리 증권거래소가 러시아·아프리카·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적 이해관계에 따라 프랑스 국가가 떠맡은 기존의 외교·군사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

는다. 내각과 의회는 계속해서 평화를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랑스를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할 대외 정책을 무의식중에 수행한다.”

비폭력 행동

다른 한편, 철저한 평화주의자들은 저항 과정에서 비폭력(직접) 행동을 선호한다. 저항 자체가 지향하는 미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대로, 폭력을 이용한 저항은 운동을 타락시킨다고 믿는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비폭력 행동을 투쟁 전술의 하나로 사용하기도 하며, 평화주의자들의 이런 행동에 함께하기도 한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스탈린주의의 방식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저항 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폭력’을 고수하는 게 불가능할 때가 있다. 국가와 체제가 더는 그 운동을 용인할 수 없다고 보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가 그렇다. 예컨대 2008년 6월 중순 이후 국면의 촛불 운동,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때 우리는 지배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목도했다. 이런 폭력에 맞서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저항 방식을 채택하길 주저하면 그 운동은 약해지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즉, 자본주의 지배자들에 맞선 폭력이 필요악일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1925년에 쓴 다른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의 목표가 폭력의 철폐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관습과 도덕이 아니라 자본주의 폭력에 맞선 구체적인 방향성과 방법을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투쟁은 결국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오늘날 전쟁과 파괴를 낳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 제국주의 질서를 용인한 채 평화협정, 군축, 유엔(UN) 같은 자본주의 국제기구의 중재 등을 통해 평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전평화 운동은 여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들의 위선적인 ‘평화’ 기초와 우리 운동 내의 평화주의를 구별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과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선 반전평화 운동에서 평화주의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트로츠키의 지적대로, 보통 사람들의 평화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한 불신을 혼란스럽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군사주의가 자본주의의 한 측면임을 주장하며 진정으로 전쟁과 폭력을 종식시키려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해야 함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박설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신의 공격 방향에서 조금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이미 노사정위를 제치고 단독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왔다고 한다.

이기권은 정부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내년 정년연장 시행에 앞서 임금피크제 등 주요 현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시작될 (산업별)사업장별 임금협에서 실제 개악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다. 당장 현대·기아차에서도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악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 내에서 의견 충돌이 컸던 일반해고 요건 문제에서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나 국회 논의조차 없이 일방으로 쉬운 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박근혜가 이토록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결코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또다시 알박한 이간질을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격의 진정한 배경은 따로 있다. 악화하는 경제 상황이 그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퍼센트로 하향 조정했고,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7일 IMF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주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도 비상한 태세를 갖추고 정부의 악랄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



3월 31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무엇이 어떻게 개악되나

지금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쟁점들을 쪼개서 다루려 한다. 노사정위에서 타협안이 조율됐던 쟁점은 당장 강행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 형식적 절차를 거치거나 약간 더 시간을 갖고 노사정위에서 야합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4월 국회에서 법을 개악하거나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쟁점은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등이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복리후생비를

제한적으로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확대 해석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정기상여금에도 적용한 바 있다. 정부 개악안이 관철되면, 전체 사업장의 3분의 1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제약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개악안도 내놔다. 주당 최장 52시간 노동을 명시한 현행법을 즉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오히려 법을 개악해 앞으로 적어도 4년간은 8시간 추가노동을 허용하겠다고 했

다. 개악안에는 추가 수당 없이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탄력근무제 확대도 포함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대표적 정책인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악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 한다. 노사합의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자·장기근속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형성해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게 만들며 단결을 어렵게 하려 한다.

첨예한 논란이 됐던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나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전문가·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이 내놓은 공익위원안이 정부 정책의 판박이였던 것을 떠올려 보면, 이는 요식절차만 거쳐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제 확대 등은 약간 연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향후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8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어떻게든 다시금 야합을 추진해 비정규직을 늘리려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자 60퍼센트가 임금 삭감의 대상이 됐다. 개인별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은 노동자들을 사측 관리자들에게 줄 서게 만들고, ‘저성과자’의 임금 삭감도 부를 것이다.

현대차 사측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존”하고 일단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깎겠다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층이 생겨나면 결국 기존 노동자들도 임금 하향 압력을 받는다.

이 같은 공격은 단지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총은 현대차의 “선도적” 임금 공격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전 사업장에 미칠 영향에 기대를 내비쳤다.

실제로 공격이 관철된다면, 이는 다른 사업장의 기준 모델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임금체계 개악을 선도하겠다고도 공언한 바 있다.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게 중요한 이유다.

국회에 기대지 말고

단호한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

정부가 단독으로 법 개악 시도 등에서 나서기로 하면서, 국회 쪽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장을 맡고 있어, 만만찮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 2일 새정치연합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사태에 대비한 바 있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야당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정부 공격을 막아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위험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해 환노위 산하 노사정 소위 논의 과정에선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수당을 삭감하는 등 정부의 개악 방향에 동의한 바 있다. 홍영표 등은 이미 탄력근무제 확대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새정치연합과 한국노총 집행부의 양보 전력을 들어, “과거와는 달리 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부는 일부 공격은 국회를

피해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려 한다.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악뿐 아니라,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도 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 기대기보다 조직된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박근혜의 질주를 저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처리 방침 직후,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5~6월 국회 개악 입법 저지 투쟁 등을 벌이겠

다고 밝혔다. 총파업 결의를 위한 총투표도 가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제 박근혜는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노동자 쥐어짜기의 액셀을 밟기 시작했다.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려면 4·24 파업을 강력하게 만들고, 하루 파업 이상으로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 한국노총에도 공동 투쟁을 제안하며 정부에 대한 항의를 키우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사정위 복귀나 국회가 아닌 진정한 투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